

광주시의회 성폭력 의혹 의원 제명 부결 왜?

“사실 확인 안됐다” 핑계 제 식구 감싸기

“소송 걸고 버티면 되레 부담” 판단

‘적절치 못한 처신’ 책임은 못 면할 듯

도덕성 시비와 의원들의 자질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광주시의회가 사회 복지법인 인·허가 과정에서 거액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된 김남일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29일 전격 처리했다. 하지만 성폭력 연루 의혹을 받아 함께 제명 표결에 부처진 김월출 의원에 대해서는 시민단체의 반발 여론에도 불구하고, 부결시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과 함께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안팎의 관측이다. 하지만 김 의원은 지난 28일 자신이 맡은 교사위원장직을 사퇴했고, 29일 재직 의원 19명 중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처리되는 제명안은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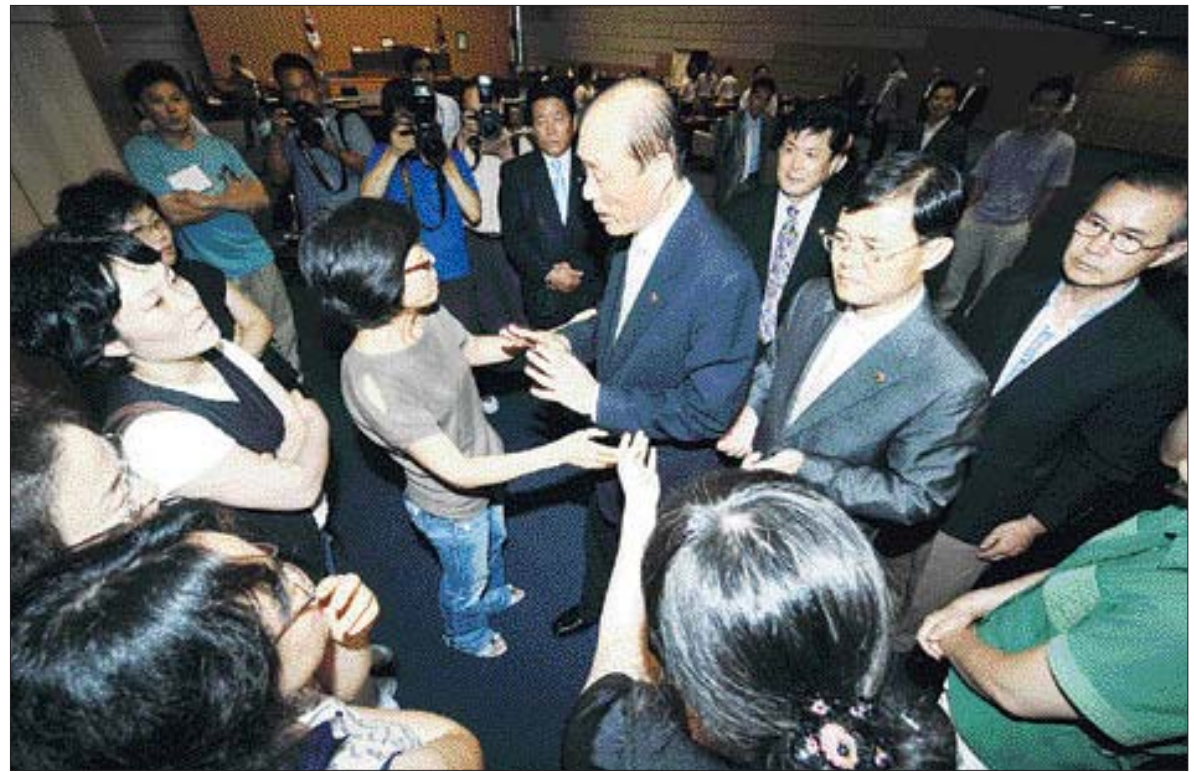
◇제명 의원 어떻게 되나=시의회가 갑남일 의원의 제명안을 통과시키면서 김 의원은 이날 의원직을 상실했다. 현행 지방자치법(78조)은 ‘지방의회 의원이 징계에 따라 제명될 때에는 의원의 직에서 퇴직한다’고 규정돼 있다.

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제81조 ‘의장은 15일 이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알려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광주시와 광주시선관위에 통보하게 된다.

하지만 행정소송법(20조)에 따라 김 의원측이 90일 이내 징계 처분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어 향후 절차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지난 2004년 광산구의회의원이 제명처분된 뒤 행정소송을 통해 의원직을 유지하는 등 지금까지 전국 지방의원 6명이 제명안 통과 뒤 소송을 제기, 의원직을 유지한 경우가 있어 김 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는 아직 속단할 수 없는 상태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시의회 강박원 의장·조호권 부의장 등이 29일 시의회 본회의장 앞에서 성폭력 연루 의혹으로 사퇴 압력을 받아온 김월출 의원의 제명안을 부결시킨 데 항의하는 여성단체 관계자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위작기자 jrwi@kwangju.co.kr

비례 김남일 의원, 의원직 상실 확정팬 승계후보 없어

광주시의회 김남일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할 경우 이를 승계할 후보가 없어 전체 시의원은 19명에서 18명으로 줄어질 전망이다.

김 의원은 지난 2006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비례대표 2번으로 광주시의회에 입성했다. 당시 민주당 비례대표 1번은 조광창 의원이었다. 김 의원은 2번으로 턱걸이했다. 광주시의원 후보로 등록된 민주당 3번은 송은미(여·41) 전 민주당 광주시당 정책자문위원

이었으나 송씨는 지난 3월 14일 탈당함에 따라 당직을 상실, 민주당 몫 비례대표 자리를 승계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 몫 비례대표를 승계할 후보는 없어졌다.

현행 공직선거법(52조)은 ‘정당추천 후보자가 당직을 이탈·변경하는 때에는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

‘독도문제’ 걸과 속 다른 美 국무부

“한·일간 문제 당사자가 해결해야”

속내는 ‘중립 강조하며 日 편들기’

미 국무부가 28일 독도를 ‘주권 미 지정 지역(Undesignated Sovereignty)’으로 변경한 미 지명위원회(BGN)의 결정에 대해 걸과 속이 드러나는 반응을 보였다.

미 국무부는 한국과 일본이 오랫동안 다투는 독도문제에 대해 어느 쪽 영유권 주장도 거들지 않는 ‘중립적’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당신들이 알아서 하라”는 속내를 강하게 풍겼다.

중개 해석해서 한국과 일본 모두 미국에는 중요한 동맹인 만큼 ‘입장관련’ 일에서는 발을 빼겠다는 뜻이지, 속내를 들여다보면 차체에 일본이 미국의 ‘중립’을 문제삼을 소지가 있는 표기와 기술을 모두 손볼 태세다.

국무부 곤잘로 갈레고스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BGN이 독도를 사실상 ‘분쟁지역’으로 분류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 “질문해 줘서 고맙다”며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국무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갈레고스 대변인 설명의 요점은 미국 정부는 논란이 되고 있는 섬에 대해서는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따라서 지난 수 십년간 계속돼 온 이런 입장은 독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 국무부 말을 역면 그대로 받아들여지면 미국이 독도 영유권한 일에서는 발을 빼겠다는 뜻으로 들린다.

하지만 갈레고스 부대변인의 말을 들어보면 결코 한국에 유리하지 않게

해석되는 부분이 적지 않다.

이를 보면 “우리는 한국과 일본이 서로 합의하는 어떤 결과도 환영할 것”이라는 부분. 그럴 리야 없었지만 이는 독도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한국에 불리한 합의가 도출돼도 미국 정부는 환영할 수 있다는 뜻을 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이번 BGN 결정이 최근 미의 회도서관의 ‘독도’관련 주제어 변경 시도와 맞물려 이뤄졌다는 점에서 미국 정부가 그간 그대로 두었던 독도관련 표기를 모두 ‘리앙쿠르 암’이나 ‘주권 미 지정 지역’ 등으로 바꾸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미국의 입장은 스스로 모순된다. 미국은 수 십년간 자신들의 정책에 위배되게 BGN의 외국어 표기와 미의회도서관의 주제어 등을 ‘방치’해 오다 최근에 부랴부랴 손질을 가하기 시작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미 CIA·의회 도서관도 ‘독도 분쟁지역’ 명기

한국정부 전방위 대처 필요

최근 미 지명위원회(BGN)의 독도 영유권 표기변경에 이어 이미 미국의 공공 기관들이 독도를 국제분쟁지역으로 간주하고 있음이 확인돼 전방위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미 중앙정보국(CIA)과 미 의회도서관 등 미국 정부와 의회 기관들이 ‘독도’를 중립적인 ‘리앙쿠르록스(Liancourt Rocks)’으로 표기할 뿐만 아니라 ‘국제분쟁지역’으로 명기해 소개하고 있는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CIA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월드팩트북(The World Factbook)’에서 ‘국제 분쟁(Disputes-international)’란

에 “한국이 지난 1954년 이후 점유하고 있는 리앙쿠르암(독도/다케시마, Tok-do/Take-shima)을 놓고 한국과 일본이 서로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고 ‘독도문제’를 언급했다.

미 의회 도서관의 한국 ‘컨트리 스터디’는 남한에 대해 설명하면서 ‘분쟁(dispute)’이란 소재목 하에 ‘일본

이(영유권)를 주장하는 리앙쿠르암’을 ‘북한과의 분계선’과 함께 포함시켰다.

미 국무부 인터넷 홈페이지도 독도를 리앙쿠르암으로 표시한 지도를 게재해 놓는 한편, 이를 분쟁 지역으로 명기한 의회도서관 ‘컨트리 스터디’를 링크시켜놓고 있다.

이와 관련, 김영기 미 조지워싱턴대 교수(동아시아 어문학과정)는 28일(현지시간) 워싱턴 특파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미 국립지리정보국(NGA)의 랜들 폴린 외국지명 담당 책임자가 독도를 ‘주권 미 지정 지역’으로 변경한 지명위원회(BGN)의 최근 결정을 원상회복하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정치권 “외교라인 교체” 확산

한나라서도 인책론 일어… 靑 반응 주목

정부의 외교 라인 교체를 주장하는 정치권의 목소리가 확산하는 분위기다.

최고기 파동과 4강 외교 실패, 금강산 피격사건 낙장보고에 이어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에서의 부실외교로 쌓여가던 불만이 미국의 독도 명칭 변경에 대한 ‘까막눈 외교’ 비판으로 이어지면서 외교 라인에 대한 불만이 폭발하는 양상이다.

이 같은 목소리는 여당인 한나라당

내에서도 비등한 상황이어서 청와대의 반응이 주목된다.

◇한나라당=외교 라인을 이대로 방치했다간 이명박 대통령이 천명했던 실용외교 전략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데다 급격히 악화된 여론을 추스르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외교 라인 인책론이 힘을 받고 있다.

한 최고위원도 전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외교라인이 대처

를 너무 못하는 것 아니냐. 본보기가 있어야 한다”고 인책론을 강하게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의장성명 파동과 미국 지명위원회의 독도 귀속국가 변경 사태 등을 고리로 외교안보 라인 전면교체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박병서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과거 한나라당이 참여정부를 ‘아마추어’라고 했는데 이명박 정부는 ‘견습정부’, ‘인턴정부’로, 해부학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 칼을 들고 있는 격”이라며 “외교적으로 파탄위기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